추석 문 닫는 무료급식소…취약층 '배고픈 명절'

광주 30곳 대부분 2~3일분 대체식 지급…홀몸 어르신들 끼니 걱정
대상자 4000여명…위탁기관들 "정해진 예산에 6일분 지급 힘들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떠오르는 추석명절에 광주지역 취약계층이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올해 6일간의 긴 추석 연휴기간(9월 28일~10월 3일) 내내 광주지역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기 때문이다. 고물가 탓에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으면 취약계층들은 외식으로 한 끼를 때우는 것 조차 부담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 '황금 연휴'에 따른 음식점 등의 장기 휴업으로 저소득층은 더욱 배고픈 명절을 보내는 도미노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무료급식소 30곳(동구 2·서구 7·남구 4·북구 12·광산구 5 곳)이 운영중이다. 모두 광주시가 복지관과 교회 등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각 시설은 6일간의 긴 추석연휴 기간 무료급식소의 문을 닫는다.

보통 3~4일간의 명절 연휴 문을 닫는 경우 대체식품을 지급해 취약계층은 명절을 보내왔지만 올해 추석은 유독 길어 대체품을 지급해도 저소득층은 '배고픈' 연휴를 보낼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줄잡아 저소득층 수천명이 끼니를 걱정해야할 난감한 상황이 됐다. 광주지역 무료급식 대상자는 4166명(광산구 635명, 동구 580명, 서구 1000명, 남구 937명, 북구 1014명)으로 60세 이상 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 계층이 이용하고 있다.

광주서구가족센터는 지난주 금요일 무료급식 대상자에게 명절 대체식품을 제공했다. 대체식품은 송편 1팩과 라면 1팩(5봉지 입), 계란 10개, 귤 2개로 구성됐다.

서구 금호종합복지관은 오는 27일부터 오리훈제 400g과 누룽지 450g, 떡 1개와 바나나 2개를 추석명절 대체식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북구 우산종합복지관은 밀키트 육개장 1개와 햇반, 식혜로 구성된 꾸러미를 준비했다.

복지관에서 지급하는 대체식품은 최대 4일분에서 적게는 2일분에 해당한다. 교회 등 일부 위탁기관은 1일분 대체식만을 지급하기도 한다.

취약계층은 이 대체품만으로 6일간의 명절을 보내야 한다. 북구 우산동의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한 김영자(여·78)씨는 "나 같은 사람은 명절에 무료급식 못먹어도 가족이 있으니 괜찮다"면서도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홀몸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틀분 대체식품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고 걱정했다.

이날 추석 기간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은 김기덕(78)씨는 "복지관에서 다들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 큰 낙이었는데 연휴에는 식사 해결은 어떻게 하나"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무료급식소도 당장 예산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365일 중 300일 식사를 기준으로 한 해 무료급식 예산을 집행한다. 이번 연휴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는 구청 차원에서 추가 예산을 지불하고 있지만 올해 추석 연휴 추가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는 남구가 유일하다.

한 무료급식소 관계자는 "10월 2일이 예상치 못하게 대체휴일로 지정됐다. 한 해 무료급식 예산에는 빨간날(공휴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휴기간 6일분을 모두 지급하는건 무리가 있다"면서 "지난해 설날까지 나오던 추가예산이 추석을 기점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평소 무료급식소 위주로 예산을 쓰다보니 대체식이 빈약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추석연휴가 6일에 달하는만큼 노숙인, 결식아동, 학대피해노인 등 소외계층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지자체가 식품권, 도시락 등 대체 급식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역 무료급식 단가는 지난해 9월부터 1000원 인상돼 1인당 4000원이다. 무료급식 관련 예산은 약 5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80%는 광주시가, 20%는 구청이 맡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추석 앞두고 사랑방 된 버스정류장 추석을 앞둔 25일 담양군 창평오일장에서 명절 제수용품 등을 구입한 어르신들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추석 고향 가기 싫은 이유 들어보니

"성적·취업·결혼 등 잔소리 스트레스 탓"
고액 명절알바에 시댁 갈등문제도 한몫

민족대명절인 추석 온 가족이 고향을 찾는 '민족 대이동'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매년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며 '힐링'이 아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점차 느는 것이 명절에 고향을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시댁, 추석, 스트레스 등의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에는 '고향 가기 싫다', '이번엔 무슨 잔소리를 하려나?'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거주하는 이수현(여·16)씨는 "지난해까지는 명절에 고향인 전주를 방문하는 일에 거부감이 없었지만 올해 초 설날 큰집에 갔더니 학교성적에 대한 질문을 집요하게 받았다"며 "추석이지만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큰이모의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라는 질문이 도화선이 돼 일가족 모두가 장래희망, 지난학기 성적 등을 물어봤다"며 "올해 추석 큰집에 가면 성적 물어볼 것이 뻔한데 1학기 성적이 좋지 못해 큰집 가기가 부담스러워졌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례들이 빈번하다보니 지난 2017년에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명절에 성적, 취업, 저축, 결혼, 출산 등의 잔소리를 할 거면 돈을 내고 해달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잔소리 메뉴판'이 퍼져 올해까지도 매년 명절이 찾아오면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유행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시댁 갈등 문제도 한 몫하고 있다.

나주시 영산동에 거주하는 김모(여·35)씨는 지난주 남편과 올해 추석연휴 계획을 세우는 중 일정 조율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등 가정불화가 생겼다.

결혼 5년차인 김씨는 결혼 직후부터 매년 명절 연휴 첫날 서울에 있는 시댁을 방문해 차례 준비를 도왔지만 올해 초 설날 시댁 식구들의 "어머님이 혼자 장 보기가 어려우니 다음엔 하루만 더 일찍 와달라"는 요구에 갈등을 겪었다.

김씨는 "명절마다 스트레스를 받느니 연휴를 반납하고 출근하는게 낫겠다"고 토로했다.

고물가에 고가의 명절알바를 하기 위해 고향을 가지 않겠다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안태환(29)씨는 "추석 연휴에 알바를 하면 평소보다 많은 알바비를 받을 수 있다"면서 "명절에 고향을 의무적으로 가기보다는 평소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게 더 낫지 않냐"고 웃어보였다.

한편 올해 초 취업정보 포털 '인크루트' 통계에 따르면 '명절 스트레스 지수'에 대해 회원 82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매우 높다'(15.4%), '약간 높다'(25.1%)로 10명 중 4명은 명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잔소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12.2%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사무장 병원' 개설 요양급여 72억 부정수급
광주동부경찰, 23명 불구속 송치

광주시 남구와 동구 일대에서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12여년 동안 72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동부경찰은 남구, 동구 일대에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40대 한의사 A씨와 50대 B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환자를 알선한 지역 택시회사 영업부장 C씨와 병원 직원 등 21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남구, 동구 일대에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환자들의 치료 항목을 부풀리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건보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급여비 총 72억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C씨와 나머지 직원들은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회당 수십여 만원씩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된 범죄수익금 1억 2600만원에 대해 우선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한편 사무장 병원은 무자격자가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우량 농지 보존 위해 축사 건립 불허 정당"
광주지법, 구례군 손 들어줘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축사 건립을 불허한 자치단체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상현)은 축산업자 A씨가 구례군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구례군의 농지 2곳(2170㎡, 1910㎡)에 축사 2동을 짓기 위해 구례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다.

구례군계획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신청 농지는 우량농지에 해당해 보전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부결 통보를 했다. 우량농지는 농촌 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농지다.

A씨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전용 없이 축사 설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량농지에 축사를 건립하는 경우에는 고도로 정비화돼 집단화 된 농지를 잠식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어 우량 농지의 보전의 필요성을 감안해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신청지가 경지정리 이후 34년 동안 벼 경작지로 운영된 점, 신청지가 축사로 변경되면 축사집단화로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악취 등으로 환경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